

2016년 군무원(2016.7.2)

1 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 ① 요금제 ② 집합제 ③ 공유제 ④ 시장제

2 가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중복성(duplication)도 가외성에 해당된다.
② 가외성은 조직의 유연성·융통성 및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인다.
③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④ 가외성은 목표에 대한 맹종성을 탈피하고 융통성을 부여하여 목표전환 현상을 약화시킨다.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 관계이다.
②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계약을 위한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④ 사회자본은 국가 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된다.

4 후기행태주의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②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③ 객관적이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적인 경험은 의식적으로 제외된다.
④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계량적 분석이 이뤄진다.

5 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경쟁과 성과중심관리 등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②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③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에 비하여 능률적이므로 공공서비스도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④ ‘절약과 능률’에 집착하는 나머지 ‘사회적 형평’등을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6 법규 중심보다는 서비스, 서비스보다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공공기관보다 시민을 더 중시하는 것은?

- ① 신행정론 ② 뉴거버넌스

- ③ 공공선택론

- ④ 신공공관리론

7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으며 경계의 제한성과 명료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② 정책영역별·문제별로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다.
③ 사회중심이론(다원론, 엘리트론)과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 신베버주의)의 현실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④ 국가와 사회의 매개를 강조하지만, 정책과정에서 행위자간 동태적 관계에서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8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원모형은 이익집단과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가 주도한다.
③ 굳히기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④ 허쉬먼(A. Hirschman)은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를 강요된 정책문제(pressed issue)로 보았다.

9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므로 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② 체제이론은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 환경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의제화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엘리트가 정책과정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근본적 가치와 합치되는 대안만 한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본다.
④ 다원주의에서는 어떠한 사회문제도 정치체제로 침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
② 점증모형은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며 전년도 답습적 예산제도와 관련된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 지침을 결정하는 데는 합리성을 중시하며 체제주의는 배제한다.
④ 만족모형은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11 대통령 소속 기관은?

- ① 방송통신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12 조직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트릭스구조는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두된 조직이다.
- ② 삼업조직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다.
- ③ 학습조직은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정과 절차, 비공식적·자발적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분립적 구조이다.
- ④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contracting-out)를 통해 연계·수행하는 조직이다.

13 대표관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를 저해할 수 있다.
- ②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외부통제의 한 방법이다.
- ③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시킨다.
- ④ 공직임용에 있어 개인의 능력·자격을 부차적 기준으로 삼으므로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가 우려된다.

14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직 공무원은 실적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 ② 정무직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개방형 임용을 하고 있다.
- ③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④ 특정직은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계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5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 ② 더 폭넓은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선택하며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므로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
- ③ 전문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므로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 ④ 임용권자가 공직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임용하는 자의적인 정실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

16 전통적 예산원칙과 그 예외의 사례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 이체
- ② 한정성 원칙의 예외 - 이용
- ③ 완전성 원칙의 예외 - 기금
- ④ 국고통일의 원칙의 예외 - 특별회계

17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예산심의 절차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 ④ 헌법 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18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결정문화론에서 선진국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크고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은?

- ① 점증예산(incrementalism)
- ② 보충예산(supplement budgetting)
- ③ 반복예산(repetitive budgeting)
- ④ 양입제출예산(revenue budgeting)

19 UN에서 제시하는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 형태의 진화·발전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① 전자정보화 ⇨ 전자자문 ⇨ 전자결정 ② 전자정보화 ⇨ 전자결정 ⇨ 전자참여
- ③ 전자자문 ⇨ 전자정보화 ⇨ 전자결정 ④ 전자자문 ⇨ 전자결정 ⇨ 전자정보화

20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이다.
- ②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③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이 저렴하다.
- ④ 시민의 권리구제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 권한을 갖는다.

2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은 없지만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다.
- ② 주로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다.
- ③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연결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 ④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있지만 제약이 많다.
- ② 상위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한도와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지방자치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주민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방재정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다.
- ② 분쟁상태인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안으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활용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협의회·협약·공청회·공람 등이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2016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 ㉡ • 재화의 유형

특 징	비배제성	배제성
비경합성	공공재, 집합재(collective goods)	요금재·유료재(toll goods)
경합성	공동소유재·공유재	사적재·사용재(私用財)·민간재

2. ㉠ ㉡ ③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므로 일반적으로 효율성(능률성·경제성)을 악화시킨다.

3. ㉠ ㉡ ① (×)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든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zero 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하는 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

4. ㉠ ㉡ ①은 후기행태주의, ②③④는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ism)는 1960년대 흑인폭동, 반전운동 등 미국의 급박한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자 가치중립적인 행태주의가 문제예측은 물론, 해결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대안적 학문으로 등장한 이론으로서 신행정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학자 이스턴(D. Easton)은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1969)에서 '후기행태주의'의 시작을 선언하고 후기행태주의의 성격을 '적실성(relevance)의 신조'와 '실천(action)'이라고 주장하였다. 후기행태주의는 현실적합성을 크게 중시하여 ㉠ 현재 급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절한 연구, ㉡ 가치에 대한 독립된 연구와 새로운 가치의 개발(가치와 사실의 통합), ㉢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 등을 주장했다.

■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행태주의	후기행태주의(탈행태주의)
행정학의 과학성(science) 강조 - 이론과학·순수과학	행정학의 기술성(art) 강조 - 응용과학·실천과학
가치중립적, 설명적·서술적 성격 경험주의,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 사실주의 주지주의(主知主義) - 지성(知性)·이성 중시	가치지향적, 응용적·처방적 성격 가치주의, 규범주의, 주관주의, 반논리실증주의 주의주의(主意主義) - 의지 중시
정치·행정제2원론. 공·사행정제1원론	정치·행정제1원론. 공·사행정제2원론
폐쇄체제관	개방체제관

5. ㉠ ㉡ ② (×)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의 분야에 있어서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성·신속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6. ㉠ ㉡ 1990년대의 뉴거버넌스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정부의 동반자이자 국정的主人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사부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는 협력, 시민의식, 민주성 등 민주적 가치와 충돌을 초래했고, 신공공관리의 개혁전략인 민영화, 감축관리 등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공적 영역에 참여할 공간을 확보해주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뉴거버넌스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7. ㉠ ㉡ ④ (×) 정책네트워크분석은 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매개를 강조하며 정책과정에서 행위자간 동태적 관계에서 정책변동 설명에 유용하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므로 분권적이고 분산적인 정치체제인 다원주의적 정치체제를 전제로 한다.

8. ㉠ ㉡ ① (×) 동원형은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의제화 후 행정PRO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여야 하는 유형으로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이거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② (○) 내부접근형이 동원형과 다른 점은 주도세력이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관료이며, 공중의제화를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구 분	주도자	공중의제화(개방성)	유사점
동원형	주도세력이 최고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	정부의제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	정부의제화 용이 공식적 참여자가 주도
내부접근형	더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인 경우가 많음	공중의제화를 막고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	

③ (○) P. J. May의 의제설정모형에서 굳히기형[공고화형](State Consolidation)은 대중의 관여정도가 높고 논쟁의 주도자가 정부(국가)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 정부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허쉬만은 이를 강요된 정책문제(pressed issue)라고 하였다(국민의 압력에 의해 의제화됨을 의미함).

9. ㉠ ㉡ ① (○) 무의사결정은 분권적·개방적·민주적 사회(다원화된 선진국)보다는 집권적·폐쇄적·권위적 사회(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므로 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예 미국 총기협회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총기규제정책 저지

② (×) 체제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는 능력상 한계로 인해 체제 내 전체 부하(負荷)업무량의 감소를 위해 채택할 문제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외부의 요구나 이슈의 정치체제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Gate-keeping이라 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기관·집단을 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 대통령·수상 등 행정수반)라 한다. 체제 내부의 과중한 부담(overload ; 과부하)을 회피하기 위해 체제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만 정책 문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④ (○) 다원주의에 따르면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의 다원화), 정치제도에 상 중요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요구에 따라 권한을 행사.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좌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polyarchy)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문제도 정치체제로 침투될 수 있다고 본다(모든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책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10. ㉠ ㉡ ③ (○)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양적 분석)과 직관·판단력·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질적 분석)을 고려한 규범적·처방적 모형으로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체제론적 입장에서 구축한다.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최적화가 가능하려면 미시적으로 정책결정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체제가 전체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체제를 모형 속에 포함시킨다.

11. ㉠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나머지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4처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협업조정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8.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전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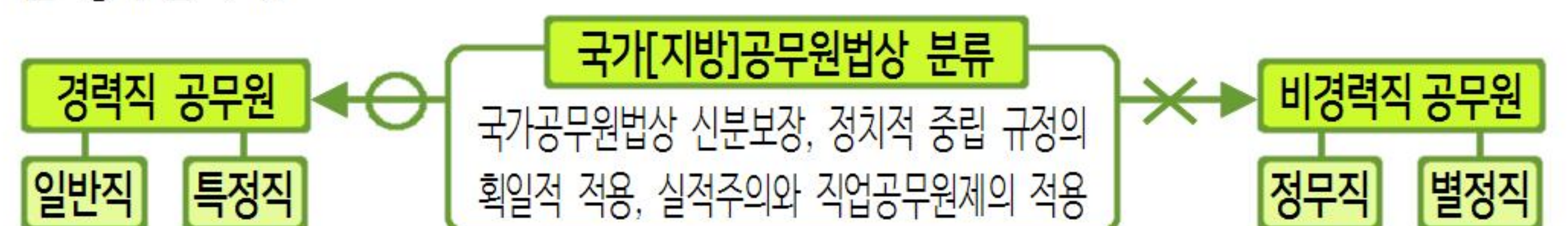
12. ㉠ ㉡ ③ (×) 기능분립적 구조 부분이 틀림. 조직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학습조직의 기본 단위는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기능팀(cross-function team)이며, 수직적 구조는 구성원 상하 간 거리감을 발생시키므로 수평적 구조를 강조한다. 또한 시스템적 사고를 위해 부서 간 경계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구성원 상호 간의 동정과 지원 정서(상호호혜), 공동생산, 협력, 일체감을 강조하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13. ㉠ ㉡ ① (○) 대표관료제는 여러 소외집단의 대표가 공직에 들어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내재화된 민중통제'이다. 관료제가 대표성있게 구성되었고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미명 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원들에 의한 통제가 아닌 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일반국민의 참여나 협력적 통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주권원리나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배될 수 있다.

② (×) 대표관료제는 행정통제 유형 중 비공식적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의 전문성 및 재량권 확대에 의해 국민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직업공무원에 대한 외부통제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책임은 비현실적이며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에서 대표관료제가 대두되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출신집단에 대한 주관적·심리적·내재적·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모든 사회집단에 의한 대중통제를 관료제나 공무원 내부로 내재화시키는 장치이며 관료집단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집단 간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내부적·비공식적·사전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중통제(공중통제·외부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적 통제(×)

14. ㉠ ㉡ ① (×) 일반직이 실적에 따른 임용과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지만 ①에서 제시된 내용은 일반직과 특징을 포함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15. ㉠ ㉡ ③ (×)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외부인사가 조직을 장악하므로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를 강화한다.

16. ㉠ ㉡ 예산의 이체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는 견해와 예외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다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상대적으로 ①을 답으로 본다.

예산의 이체는 예산집행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변동에 따라 그 업무에 배정된 예산도 함께 이관되는 것이다. 예산의 이체는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 없지만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 ① 이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법률 개정이 곧 국회의 승인이 이뤄진 것과 같아서 국회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체는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을 통한 조직 구조·기능 개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전의결원칙은 예산집행 이전(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예산상의 원칙이므로 조직 개편이 법률 제정으로 이뤄졌다하여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다.
- ② 또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 사례는 사후승인을 얻는 것들이므로 이체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전용이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③ 이체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더 타당한 설명은 국회가 통제하는 목적, 금액, 시기 등의 한정성에는 변화가 없이 행정부 내부 기관 간 예산 사용 주체만 바뀔 뿐이므로 이는 사전의결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 국가재정법 제47조

- ② 기획재정부장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 ① (○) 헌법 55조 2항. ② (○) 헌법 55조 1항

- ③ (×) 예산안 제출 후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④ (○)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더 일찍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야 함)
-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

■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

구 분	국가경제력(富; Wealth) 큼	국가경제력 작음
재정의 예측가능성 높음	점증형(incrementalism) : 선진국	양입제출형(revenue budget : 세입예산) : 미국 도시정부
재정의 예측가능성 낮음	보충형(supplement budget) : 행정능력이 낮은 경우	반복형(repetitive) : 후진국

19 **㉠**

■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의 진화 형태(UN) : 전자정보화 ⇨ 전자자문 ⇨ 전자결정**

전자정보화(e - Information)	정부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짐.
전자자문(e - Consultation)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의 가상공간에서 상호 의사소통과 직접 토론,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시민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짐.
전자결정(e - Decision)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 단순 자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토론 결과 어떤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20 **㉠** ① (×) 스웨덴의 옴부즈만의 의회소속이며, 통제방식은 내부통제가 아니라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21 **㉠** ① (○)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의 재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동시에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이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22 **㉠** ① (×) 우리나라에도 있다.

- ③ (○)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확실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므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곤란해져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 ④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전달 통로 또는 현장과 결정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23 **㉠** ①② (○)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국회나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됨), 주민의 권리·의무관련 사항이나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규칙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다. 즉 조례로는 법정외세를 신설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세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④ (×)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는 폐지되고 기준인건비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 ①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② (○) 제20조 1항. ③ (○) 제14조 1항.

- ④ (○)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공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5 **㉠** ③ (○) 일부 문제집에서 협의회나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협약도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조정 방법도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주민과의 갈등 조정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분쟁 조정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독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정결정을 한다.

■ **감독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분쟁 조정**

